

2026년 1월 17일 시행

## 제3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	선택과목 표기 ( ○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 안내사항

1.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의 선택유형을 확인하여 시험지의 '선택과목 표기란'에 ○ 표기해 주십시오.
2.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선택과목 ( 1 ), 선택과목 ( 2 )의 과목명을 답안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3. 선택과목의 페이지 수를 확인한 이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총 44페이지입니다.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1~7페이지 (총 7페이지)	8~15페이지 (총 8페이지)	16~30페이지 (총 15페이지)	31~37페이지 (총 7페이지)	38~44페이지 (총 7페이지)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 행정학 】

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방향잡기(steering)에서 노젓기(rowing)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 ②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하고,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가적 정신을 정부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④ 뉴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였다.
- ⑤ 뉴거버넌스론은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강조하였다.

2. <보기>에서 제시한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 기〉

- ㄱ. 신공공서비스론
- ㄴ. 정치·행정이원론
- ㄷ. 행태주의

- ① (ㄱ) → (ㄴ) → (ㄷ)
- ② (ㄱ) → (ㄷ) → (ㄴ)
- ③ (ㄴ) → (ㄱ) → (ㄷ)
- ④ (ㄴ) → (ㄷ) → (ㄱ)
- ⑤ (ㄷ) → (ㄱ) → (ㄴ)

3.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행정학에 접목하였다.
- ②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였다.
- ③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시민의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의 합계이다.
- ㄴ.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정의, 선, 자연법 등으로 표현된다.
- ㄷ.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 ㄹ. 과정설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익의 조정·타협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5.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을 사회전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환경 변수를 포함한 행정 현상에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②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연구한다.
- ③ 문제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성격, 행위자의 성격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 ④ 논리적 구성요건으로 분절성(discreteness), 상충성(trade-off), 균등성(equality), 효율성(efficiency)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딜레마가 초래된다.
- ⑤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드러운 개입주의(soft paternalism)를 지향한다.

6. <보기>에 제시된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 기〉	
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ㄴ. 통일성의 원칙	
ㄷ. 행정부 재량의 원칙	
ㄹ.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ㅁ. 사전의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ㄴ, ㄹ	ㄱ, ㄷ, ㅁ
③	ㄴ, ㅁ	ㄱ, ㄷ, ㄹ
④	ㄴ, ㄹ, ㅁ	ㄱ, ㄷ
⑤	ㄷ, ㄹ, ㅁ	ㄱ, ㄴ

7.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전용은 품목별 예산구조의 입법과목인 장, 관, 항 간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계속비는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그 회계연도부터 3년 이내로 하지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③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8.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관료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한다.	
ㄴ. 와그너(Wagner)의 국가활동증대법칙은 재정지출 팽창의 원인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수요 증대에서 찾는다.	
ㄷ. 총체주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각 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ㄹ.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은 생산성 성장 부문과 비성장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재정지출 팽창 원인으로 설명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 정책 유형과 대표적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분정책 - 항만시설 구축, 기업 관련 보조금 지원
-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사회보장지출
- ③ 상징정책 - 징병, 국경일
- ④ 구성정책 - 선거구 조정, 군인퇴직연금정책
- ⑤ 규제정책 - 「산업안전보건법」, 항공노선권 배분

10.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하여 사회 쟁점을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 ② 내부접근형은 집행에 필요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가 사회문제를 주도하여 공중의제로 확산시킨 이후 정부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유형이다.
- ③ 동원형은 정부에게 정책의제 채택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으며 허시만(Hirshman)의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 ④ 동원형과 내부접근형 둘 다 이익집단 활동이 활발한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 ⑤ 내부접근형은 최고 통치자나 고위 정책결정자가 의제형성을 주도하지만, 동원형은 이들보다 낮은 지위의 고위 관료가 의제형성을 주도한다.

11.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능률성은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 ② 효과성은 비용보다는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 ③ 대응성은 시민들의 요구나 선호 및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 ④ 수평적 공정성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기계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 ⑤ 파레토 최적과 칼도-히스 기준은 정책 효과나 비용의 배분 상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배분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으로 적절하다.

12. 매틀랜드(Matland)의 정책집행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구조의 상황에 따라 집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달라진다.
- ②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을 두 차원으로 하여 네 가지 정책집행 상황을 설정한다.
- ③ 하향적 접근은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지고, 상향적 접근은 정책이 모호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설명력을 가진다.
- ④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는 관리적 집행이며, 모두 높은 경우는 실험적 집행이다.
- ⑤ 정책이 명확하고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는 정치적 집행이며, 집행 결과는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1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은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정치를 일련의 집단 행동의 딜레마로 이해한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계급구조와 같은 거시적 변수와 개인의 선호 체계와 같은 미시적 변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강조한다.
- ④ 규범적 동형화는 환경이 불확실성을 야기할 때 다른 성공적인 조직을 본받으려는 동기에서 나타난다.
- ⑤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기존제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인 다른 경로의 선택 가능성을 높여준다.

14.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의 집행권과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는다.
- ②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달리 규약에 대해 상급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조례 제정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지방협의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이다.
- 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관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5.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의원선거와 비례대표의원선거로 선출한다.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 ③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를 선출한다.
- ④ 기초지방의회의원은 2010년 이래로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구당 3~4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 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공개하는 정당명부식 방식으로 유권자가 정당별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16. 피터슨(Peterson)의 도시 한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정책은 도시의 정치체제에 존재하는 집단·기관·파벌 간의 갈등과 협상의 산물이다.
- ② 도시정부를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시장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③ 도시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④ 도시정책을 개발정책(developmental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할당정책(allocative policy)으로 구분한다.
- ⑤ 도시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 정책을 선호하고, 재분배 정책은 선호하지 않는다.

17.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입법·사법·국민과 같은 외부적 환경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 ② 내적 책임은 행정조직 또는 공무원이 상급 기관·감찰 기관·결과 평가·직업윤리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 ③ 정치적 책임은 유권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하며 관료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낮다.
- ④ 법적 책임은 공식적인 지위·역할·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의미하며 전문가적 책임에 비해 통제 수준이 높다.
- ⑤ 행정부의 전문성·복잡성 심화로 인해 외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내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

18.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학적 관리론이 노동자를 연구의 초점으로 두었다면, 행정관리론은 관리자를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 ②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간과했다.
- ③ 인간관계론은 조직 외부 환경이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이론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상황적응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모든 상황에 적응할 조직구조를 탐구한다.
- ⑤ 행정관리론에서 제시되는 원리나 원칙은 정의가 불명확하고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공공 조직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 프랜치(French)와 레이븐(Raven)이 제시한 여섯 가지 권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직에서의 직위 또는 역할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 ② 보상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권력이다.
- ③ 특정 분야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권력으로, 학위, 경력, 업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이 어떤 개인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을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개인의 특성, 매력 등에서 유발된다.
- ⑤ 조직의 생존에 위협이 될 외부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잠재적 도전을 최소화하고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20. <보기>에 해당하는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토머스(Thomas)와 킬만(Kilmann)이 제시한 갈등 관리 방식의 하나이다.
- 독단성의 정도는 낮고, 협조성의 정도는 높다.
- 조직 구성원의 협력을 불러올 수 있지만, 중요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을 우선시하며 복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② 정확한 정보 탐색, 최선의 해결책 탐색 등의 특징이 있다.
- ③ 문제에 관한 무관심, 갈등 없이 살아가는 방식 선호 등의 특징이 있다.
- ④ 상대방을 압도하는 형태로 갈등을 처리하며, 경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⑤ 협상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21. <보기>에 해당하는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 유형 중 하나이다.
- 사업 단위의 수평적 분화에 기반한다.
- 조정 수단으로 산출물의 표준화를 활용한다.
- 중간 관리자가 준독자적·준자율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한된 수직적 분권 형태를 취한다.

- ① 신설 조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핵심 운영 부문이 중요하다.
- ② 전문화 수준은 중간 정도이며, 전략 부문이 장기적 계획에 집중할 수 있다.
- ③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등의 팀을 구성한 일시적 조직 체계를 강조한다.
- ④ 표준화된 지식과 일상적 기술을 통한 운영이 강조되며, 대학이나 연구조직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⑤ 전문화 수준은 높고, 기술 구조 부문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22.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임용 체계 등의 특징이 있다.
- ② 실적제는 기회균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정치적 중립 등의 특징이 있다.
- ③ 엽관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공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 ④ 대표관료제는 정책 결정에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나 이익보다 현재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실적제는 엽관제에 의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고, 이때의 실적(merit)은 능력, 자격, 지식 등으로 정의된다.

23. <보기>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요구가 달성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
- 어떠한 결과에 부여한 가치를 얻으려는 욕구의 크기와 특정한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동기유발에 영향을 준다.

- ① 잘 설계된 직무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② 창의성을 계발하는 직무는 개인의 자율성과 효능감을 강화하여 그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③ 승진하고 싶을 때 높은 성과를 내면 승진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열정을 발휘하는 수준으로 개인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 ④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 설정과 그 목표 성취에 대한 환류는 개인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 ⑤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그 결과인 보수 비율이 같은 직무 상황의 상대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노력하려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24.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은 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 ②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 %를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 ③ 기금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만을 수입으로 한다.
- ④ 인사혁신처장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을 담당한다.
- ⑤ 2018년 연금 개혁으로 퇴직 수급 요건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로 완화되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를 기준소득월액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25. 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③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하며,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한다.
- ④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는 계급마다 다르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은 1년 이상, 8급과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이다.
- ⑤ 전보는 같은 계급 내의 수평적 인사이동이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 민법총칙 】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2.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으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 대해 새롭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가 효력이 있다.
- ⑤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②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③ 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④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나 상속이 허용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6. 법인 아닌 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甲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甲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④ 乙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乙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8.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중중의 규약 중 ‘중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중중 회장 자격 제한 조항
- ㄴ. 단속규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역주택조합과 통정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
- ㄷ.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정
- 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 받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된다.
  -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0. 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데, 증여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0일 X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과 乙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의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甲과 乙이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ㄷ. 2025년 4월 1일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ㄹ. 2025년 5월 1일 乙이 丁과 Y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           |        |
|-----------|--------|
| ① ㄱ       | ② ㄱ, ㄷ |
| ③ ㄱ, ㄹ    | ④ ㄴ, ㄹ |
| ⑤ ㄴ, ㄷ, ㄹ |        |



14.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ㄴ.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ㄹ.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의 연기를 구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5. 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4월 16일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甲이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乙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한 바 없었다면, 甲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 ② 대리행위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
- ④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⑤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매매계약이 사후(事後)에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 ⑤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乙은 甲에게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확정된다.
- ④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甲과 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ㄹ.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④ 강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 당시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법정주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2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 관계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무효인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 ④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전채권자가 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5. 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2021년 10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은 X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甲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② 甲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③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甲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채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甲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乙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 【 형사소송법 】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므로,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극적 진실주의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 ㄷ. 적법절차원칙이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 ㄹ.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지 않은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 ㅁ. 무죄추정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일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 ㅂ.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령 검사의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ㅅ.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므로, 피해자 A가 제1심 법정에서 협박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5세라고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A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A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 ②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③ A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甲의 과실로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되자,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甲측으로부터 그 기소 후 합의금을 수령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A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 ④ 동거하지 않는 A의 자매인 甲은 법원이 선임한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A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약 4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법원이 A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甲에서 변호사 L로 개임하였음에도 甲이 공탁금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인계하지도 않아 L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甲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甲에 대한 L의 형사고소는 적법하다.
- ⑤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3.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약식명령은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 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한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ㄷ.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되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ㄹ.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면, 그가 이후 당해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척의 원인이 된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ㄴ, ㄷ    | ④ ㄷ, ㄹ |
| ⑤ ㄱ, ㄴ, ㄷ |        |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불구속 재판 중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의 사유가 충족되어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체포적부심에서의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ㄹ.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심문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적부심사를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ㅁ. 피의자의 석방기회를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ㅁ

5.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며, 이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 ㄷ.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부의 방식은 위 목록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 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ㅁ.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7.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8. 수사의 종결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ㄴ.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ㄷ.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ㄹ.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소자의 경우 그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재정신청 제기기간내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 ㅁ.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과 그 취소는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 ④ 3개                      ⑤ 4개

9.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소제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갖는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공소권행사인 경우, 무죄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
- ㄴ.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를 공소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 ㄷ.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에서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 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 ㄹ. 공소사실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된 공소제기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경우라면 판결 주문에 유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나 판결 이유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무죄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ㅁ.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1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는 취지 및 근거에 관한 긴급행위설에 의하면 ‘대는 소를 검한다’는 원리가 작용하여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 ㄴ. 피의자의 체포가 완료된 상황에서 체포된 장소와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사전 영장 없이 수색하여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인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해당 증거물에 대하여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
- ㄷ. 타인의 주거(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이 아님)인 체포현장에서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색에 참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 ㄹ. 사전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색은 위법하게 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에서 제시하는 기호의 인물은 각 항마다 다름)

—<보 기>—

- ㄱ.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17세)의 이웃 주민 甲은 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A에게 욕설을 하여 친고죄인 모욕죄를 범하였고, A는 甲에 대해 모욕죄로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생각이 바뀌어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였다. A의 고소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의 아버지 B(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자)는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기간 내에 甲을 상대로 위 수사기관에 위 모욕죄에 관한 고소를 서면으로 제기하였다. 사안이 그와 같다면, A의 적법한 고소취소로 인하여 A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한 이상 법정대리인인 B의 위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B의 甲에 대한 위 모욕죄 고소는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 甲과 B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ㄴ.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자)를 상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甲은, A의 고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확인하고는 발 빠르게 움직여 A와 화해한 다음 A로부터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수사관에게 ‘A와 합의하였으므로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A에게 전화하여 甲과 합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였고, 이에 A는 ‘甲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는 내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다. 甲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추후에라도 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생각이 바뀐 A가 위 사건에 관한 甲에 대한 고소를 고소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 수사기관에 제기하였다면, A는 이미 고소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고소제기는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ㄷ. 친고죄의 고소권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자)가 수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범인 甲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기간 내에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甲과 A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ㄹ. 甲과 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공범으로서 피해자 A(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자)에 대하여 함께 범하였고, A는 甲, 乙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적법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乙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는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乙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접수하였다면, 甲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유지된다(甲과 A, 乙과 A는 각각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을 전제한다).
- ㅁ.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           |        |
|-----------|--------|
| ① ㄱ, ㅁ    | ② ㄴ, ㄷ |
| ③ ㄴ, ㄹ    | ④ ㄹ, ㅁ |
| ⑤ ㄱ, ㄷ, ㄹ |        |

12.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인 바,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소제기된 위 공범에 대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공범자의 범위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13.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절도 범죄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어 위 절도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공소제기된 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절도죄에 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수소법원이 위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절도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검사가 해당 피의자를 위 절도죄로 구속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위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 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4.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해당한다.
- ②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 제출물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할 수 있으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6. <조건>에 따른 <보기 1>에 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 건〉

<보기 1>의 각 지문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보기 2> 각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기 1> 서두의 기초적 전제 사실 및 <보기 2> 각 해당 지문의 서두에 한글 자음으로 특정된 <보기 1>의 각 지문에 관한 쟁점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은 경위사실로만 고려하며, <보기 1>의 나머지 지문에 관한 위법 또는 하자는 고려하지 말 것(예컨대, <보기 1>의 ㄱ과 관련하여 설령 피의자신문 등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기 2>의 C 지문에서는 ‘ㄴ 관련’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ㄱ 관련 하자나 위법이 법원의 관할 여부에 관한 <보기 2>의 C 지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 됨).

〈보 기 1〉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구에서 희귀 고가품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였고, 甲의 친구 乙은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한 甲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청주 일원에 숨겨주어 범인은닉죄를 범하였다. (이상은 기초적 전제사실임)

- ㄱ. 검사는 위 사건으로 甲을 소환조사하려 하였으나 甲은 검사의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였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은신처 앞에서 잠복한 끝에 甲의 격렬한 저항에 맞서 여러 수사관들과 함께 甲을 제압하고 적법하게 甲을 체포하여 검사실에 인치 후 피의자신문을 하였으며, 甲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 ㄴ. 그 후 검사는 甲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짓반응이 회보되었다.
- ㄷ. 그러자 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에 관하여 판사 A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甲은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ㄹ. 甲의 절도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존재하고, 乙의 범인

은닉죄 사건에 관한 고유의 토지관할은 청주지방법원에만 존재하며, 양 사건 모두 1심에서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ㅁ. (본 지문과 관련해서는 관할 문제와 무관하게 甲과 乙의 사건이 적법하게 병합기소된 것을 전제함) 甲과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1심 재판의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고, 甲은 1심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병합심리 중에 1심 법정에서 진행된 乙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乙은 “甲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ㅂ.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 B는 재판장 C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법관기피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甲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위 C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 ㅅ. 위 1심 재판에서 판사 C만의 관여하에 甲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甲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甲에 대한 앞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던 판사 A가 배석판사로 근무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보 기 2〉

- A. (ㄱ 관련) 甲에 대한 체포 및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 B. (ㄴ 관련) 甲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 및 전문법칙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甲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 C. (ㄹ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모두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서 다른 사건의 1심도 관할할 수 있으나,

검사가 위 두 사건을 병합기소 하지 않고, 먼저 甲의 절도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여 1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乙의 범인은닉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로 기소하여 두 사건의 병합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甲의 절도죄에 대한 1심 심리가 먼저 종결된 경우에는 乙의 범인은닉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D. (ㄹ 관련) 乙의 그러한 진술을 甲의 절도죄에 관한 1심 재판에서 甲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단, 본 지문의 정오를 판단함에 있어 위 절도죄와 범인은닉죄는 공범이 아니라는 점과 증거동의를 없다는 점을 전제한다).

E. (ㄴ 관련) 변호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은 독립 대리권이므로 B는 피고인인 甲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F. (ㄷ 및 ㄱ 관련) A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전심판여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A, B, D
- ② A, C, E
- ③ B, D, F
- ④ C, E, F
- ⑤ B, C, D, F

1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를 없다고 전제한다).
-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라도, 업무상 통상 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유연하게 완화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항범까지 포함한다.

18.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유효하다.
-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동법 제318조 제1항)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⑤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면 그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19.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과 경기도 지역 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하여야 한다.
-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③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사유로 전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보상하여야만 한다.
- ④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21.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②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동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동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동법 제72조가 준용된다.
- ③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
- ④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몰수물은 판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22.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ㄴ. 공소기각의 재판보다 무죄판결이 형사보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은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권이 있다.
- ㄷ. 재판 가운데 물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의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지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변론 종결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의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 ①  $\neg$   
②  $\neg, \perp$   
③  $\neg, \sqsubset$   
④  $\sqcup, \perp$   
⑤  $\neg, \sqcup, \sqsubset$

2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도,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는 담보되지 않아도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은 배제될 수 있다.
- ㄷ.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

- ①  $\neg$
- ②  $\perp$
- ③  $\neg, \perp$
- ④  $\perp, \perp$
- ⑤  $\neg, \perp, \perp$

24.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 ㄴ.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neg$
- ②  $\perp$
- ③  $\neg, \perp$
- ④  $\perp, \top$
- ⑤  $\neg, \perp, \top$

25. 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때에는,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될 필요가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④ 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⑤ 위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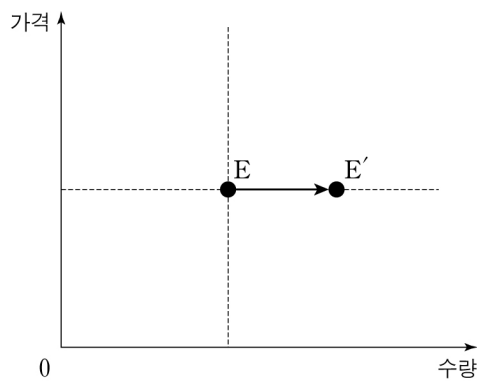
# 【 경제 학 】

1. 표는 재화의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분류된 서로 다른 유형의 재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 재화	㉠
	없음	㉡	㉢

- ㉠에는 공유 자원이 해당한다.
- ㉠의 소비에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 ㉡의 사례로 유료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들 수 있다.
- ㉡의 소비 행태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 ㉢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된다.

2. 그림은 X재의 시장 균형 E에서 E'으로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 균형 변화를 가져오는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 |              |              |
|--------------|--------------|
| ① 소비자의 소득 증가 |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
| ② 보완재 가격 하락  | 생산 기술의 향상    |
| ③ 보완재 가격 상승  |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
| ④ 대체재 가격 상승  | 생산자 수의 감소    |
| ⑤ 대체재 가격 하락  | 생산 기술의 향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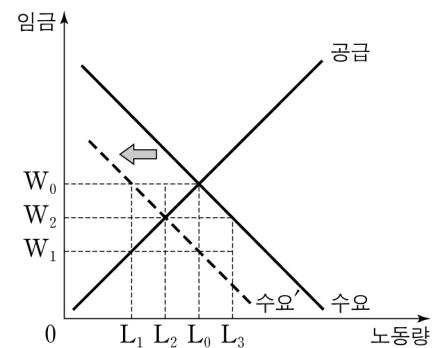
3. X재 시장은 소비자 5명과 생산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는 X재 1개에 대한 소비자 갑~무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생산자 A~E의 최소 요구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X재를 1개씩 1개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소비자	갑	을	병	정	무
최대 지불 용의 금액(만 원)	1	2	3	4	5

생산자	A	B	C	D	E
최소 요구 금액(만 원)	3	4	5	6	7

- 시장 균형 거래량은 3개, 균형 가격은 5만 원이다.
- 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는 6만 원이다.
-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 정부가 소비자에게 X재 1개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장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 정부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X재 1개당 보조금이 커질수록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4. 그림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임금이 완전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경우와 완전 신축적인 경우를 비교할 때 시장 임금의 차이와 고용량의 차이로 옳은 것은?



시장 임금의 차이

고용량의 차이

- |   |             |             |
|---|-------------|-------------|
| ① | $W_0 - W_1$ | $L_0 - L_1$ |
| ② | $W_0 - W_1$ | $L_0 - L_2$ |
| ③ | $W_0 - W_1$ | $L_3 - L_1$ |
| ④ | $W_0 - W_2$ | $L_2 - L_1$ |
| ⑤ | $W_0 - W_2$ | $L_3 - L_2$ |



5. X재 시장의 수요 곡선은  $Q^D=100-2P$ 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Q^D$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가격이다)

—<보 기>—

- ㄱ.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과 2의 범위 내에 있다.
- ㄴ. 시장 균형 가격이 10일 때,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이다.
- ㄷ. 시장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 X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 ㄹ. 시장 균형 가격이 25일 때, X재 시장 판매액은 최대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X재를 생산하는 A기업의 고정 비용은 10,000원이고, 현 시점에서 평균 비용의 최저점인 3,000원에 10개를 생산하고 있다. X재의 시장 가격이 2,500원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윤 극대화를 위해 A기업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 ②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의 한계 비용은 3,000원이다.
- ③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은 2,000원이다.
- ④ 현재 생산량 수준에서 A기업은 5,000원의 손실을 실현하고 있다.
- ⑤ A기업이 생산을 중단한다면 10,000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7. 표는 소비자 갑, 을, 병의 X재, Y재에 대한 각각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두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갑, 을, 병만 존재하고 각 제품을 두 개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기업은 X재, Y재를 각각 단품으로 혹은 묶어서 판매할 수 있고, 두 재화의 한계 비용은 각각 2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단위: 만 원)

구분	X재	Y재
갑	6	5
을	5	10
병	3	11

- ① X재의 가격을 3만 원으로 설정한다.
- ② Y재의 가격을 10만 원으로 설정한다.
- ③ X재와 Y재를 묶은 상품의 가격을 15만 원으로 설정한다.
- ④ 갑, 을, 병이 각각 X재와 Y재를 모두 구입하도록 가격을 설정한다.
- ⑤ 기업이 극대화하는 이윤은 21만 원이다.

8. 기업 A와 B는 상품 생산을 위해 ○○ 지역의 호수 자원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각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호수에 오염을 배출하거나 정화 시설을 갖추어 오염을 배출하지 않을 수 있다. 표는 오염 배출 여부에 따른 A와 B의 보수를 (A의 보수, B의 보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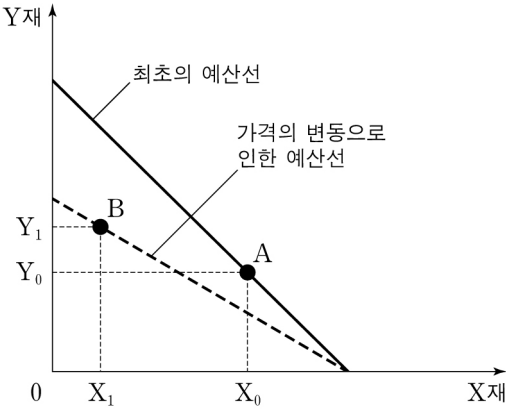
구분		기업 B	
		오염 배출	오염 배출 안함
기업 A	오염 배출	(30, 30)	(50, 20)
	오염 배출 안함	(20, 50)	(45, 45)

- ① 내쉬 균형은 A와 B 모두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 ② B의 우월 전략은 오염을 배출하는 것이다.
- ③ 두 기업 간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내쉬 균형은 존재한다.
- ④ 각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 선택을 하면, A와 B 모두 가장 큰 보수를 얻게 된다.
- ⑤ 각 기업의 입장에서 최적 선택을 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 오염 배출 문제가 해결된다.

9. 10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각종 재해를 당할 확률은 20%이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 가치는 25억 원이 되며, 재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100억 원 전체를 보상해 준다. 갑의 자산 가치( $W$ )에 대한 효용 함수가  $U(W) = 2\sqrt{W}$ 일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W$ 는 갑의 자산 가치를 억 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 ① 갑의 기대 가치의 효용은 기대 효용보다 크다.
- ② 갑의 부동산에 대한 확실성 등가는 81억 원이다.
- ③ 갑의 부동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4억 원이다.
- ④ 갑의 부동산에 대한 공정 보험료는 15억 원이다.
- ⑤ 갑의 부동산에 대한 최대 보험료는 20억 원보다 크다.

10. 소비자인 갑은 예산 제약하에서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 그림은 X재 또는 Y재의 가격 변동 전 갑의 최적 소비점 A와 가격 변동 후 최적 소비점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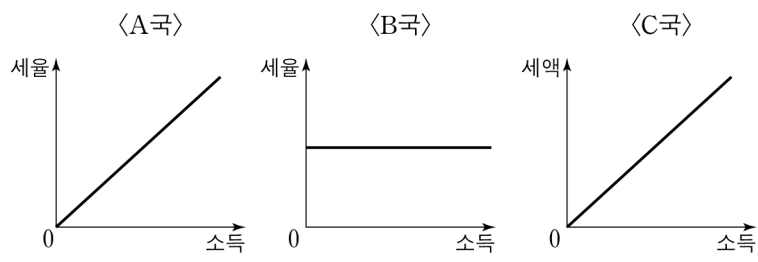
- ㄱ. Y재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 ㄴ. 갑의 X재 최대 소비 가능량은 감소하였다.
- ㄷ.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갑의 Y재 소비의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보다 크다.
- ㄹ. 갑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X재 시장에는 기업 A, B만 존재하고 A가 먼저  $Q_A$ 를 결정하면 B가 순차적으로  $Q_B$ 를 결정하는 슈타켈 베르크 경쟁을 가정하자. X재 시장의 역수요 함수는  $P = 50 - Q^D$ 이고 X재 생산에 따른 A와 B의 한계비용은 각각 20과 10일 때, 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P$ ,  $Q^D$ ,  $Q_A$ ,  $Q_B$ 는 각각 X재의 가격, X재의 수요량, 기업 A의 생산량, 기업 B의 생산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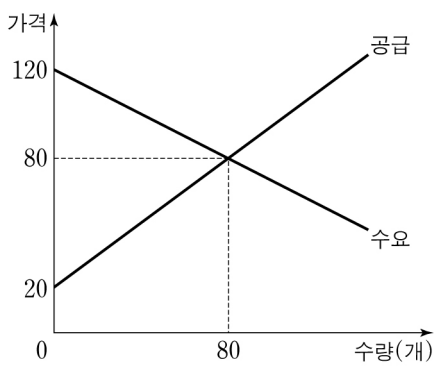
	$Q_A$	$Q_B$
①	10	15
②	10	20
③	10	30
④	15	20
⑤	15	10

12. 그림은 A국, B국, C국의 소득과 세율 또는 세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국 정부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② B국은 역진적 소득세 정책을 적용한다.
- ③ C국은 모든 국민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 ④ B국은 고소득자에게, C국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 ⑤ A국의 소득 대비 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높다.

13. 그림은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X재 시장은 생산 측면에서만 개당 일정액의 외부 효과가 매 시기마다 동일하게 발생하고, t시기 X재의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40개이다. t+1시기에는 X재 수요량이 각 가격에서 50개 증가하여 시장 균형 거래량이 100개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t시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였다.
- ② t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25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 ③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60개이다.
- ④ t+1시기에 생산자에게 개당 5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효과가 해소될 수 있다.
- ⑤ t+1시기에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의 사회적 한계 비용은 t시기보다 25만큼 크다.

14. 갑과 을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전량 투입하여 갑은 X재 10개 혹은 Y재 5개를 생산할 수 있고 을은 X재 5개 혹은 Y재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과 을이 모두 X재만 생산한다.
- ② 갑과 을이 모두 Y재만 생산한다.
- ③ 갑과 을이 각각 자신의 노동력을 1/2씩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한다.
- ④ 갑은 자신의 노동력을 1/2씩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을은 Y재만 생산한다.
- ⑤ 을은 자신의 노동력을 각각 1/3과 2/3로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고, 갑은 X재만 생산한다.

15. 표는 A국의 2023년~2025년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고 기준 연도는 2025년이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명목 GDP(억 원)	90	95	99
GDP 디플레이터	90	96	㉠

- ① ㉠은 99이다.
- ② 2024년 명목 GDP는 실질 GDP보다 크다.
- ③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양(+)의 값이다.
- ④ 2025년 실질 GDP는 100억 원이다.
- ⑤ 2025년 물가 상승률은 2024년 대비 감소하였다.

16. 국민 소득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소득은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 ② 폐쇄 경제에서는 국민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이 일치한다.
- ③ 중고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가사 노동, 봉사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국민 소득은 국민 순생산에서 간접세는 차감하고 정부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다.

17.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의 명목 이자율은 A국이 연 8%, B국이 연 4%이다. 표는 A국과 B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율과 이자 소득세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피셔 가설이 성립하고, 이자 소득세는 연간 명목 이자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단위: %)

구분	A국	B국
인플레이션율	5	1
이자 소득세율	10	10

- ① 조세 부과 전 정기 예금의 실질 이자율은 A국 상품이 연 -3%이다.
- ②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명목 이자율은 B국 상품이 연 3%이다.
- ③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실질 이자율은 A국 상품이 연 7.2%이다.
- ④ 조세 부과로 인해 B국 정기 예금 상품의 연 실질 이자율은 조세 부과 전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 ⑤ 조세 부과 후 정기 예금의 연 실질 이자율은 B국 상품이 A국 상품보다 0.4%p 높다.

18.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저소득 국가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소득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

ㄴ. 저축, 교육, 자본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이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ㄷ. AK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자본 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ㄹ. R&D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A국의 t년 인구는 100만 명이고 15세 미만 인구는 20만 명이며 실업자 수가 취업자 수의 25%인 12만 명이다. t+1년 실업률은 25%이고 생산 가능 인구 중 60%만이 취업을 하거나 구직 활동 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1년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는 전년과 동일하다)

- ① t+1년 고용률은 50%이다.
- ② t+1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32만 명이다.
- ③ t+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50%보다 높다.
- ④ t+1년 실업률은 t년 대비 5%p 상승하였다.
- ⑤ t+1년 경제 활동 참가율은 t년 고용률과 같다.

20. 표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A국과 B국 간 무역은 리카도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양국 모두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다)

구분	A국	B국
X재	25	120
Y재	50	80

- ① A국의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1/2단위이다.
- ②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 ③ B국은 X재 30단위와 Y재 60단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 ④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3이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⑤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1:1이면 A국은 X재 1단위당 Y재 1/2단위의 이익을 얻는다.

21.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최근 A국 경제에 뚜렷한 경기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4%에서 2024년 6.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A국 정부는 이 현상을 총수요 변화에 따른 경기 변동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은행의 ㉡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

L

- |            |            |
|------------|------------|
| ① 소득세율 인상  | 기준 금리 인하   |
| ② 법인세율 인하  | 공개시장 채권 매각 |
| ③ 재정 지출 축소 | 지급 준비율 인상  |
| ④ 재정 지출 확대 | 공개시장 채권 매입 |
| ⑤ 재정 지출 확대 | 기준 금리 인상   |

**22.** A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화폐 중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은행의 예금 형태로 보유한다. A국 중앙은행은 은행 예금에 대해 법정 지급 준비율을 20%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의 채권 매입을 통해 1,200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면 최종적으로 창출되는 통화량의 최대 금액은?

- ① 1,200달러                      ② 2,000달러  
③ 2,400달러                      ④ 4,800달러  
⑤ 6,000달러

**23.** 개방 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Q^D = 200 - P$ 이고, 공급 곡선은  $Q^S = P$ 이며 국제 가격은 40달러이다. A국 정부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 수입량을 80단위로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단,  $Q^D$ ,  $Q^S$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X재의 공급량, X재의 가격이다)

- ① 2,000달러                      ② 2,800달러  
③ 3,000달러                      ④ 4,800달러  
⑤ 5,600달러

24. t시점 외환 시장에서 미국 통화 1달러는 한국 통화 1,500원과 교환되고 일본 통화 100엔은 한국 통화 1,000원과 교환된다. 3국 간 교차 환율 거래가 가능하다. 1년 후 외환 시장 변화로 미국 통화 1달러는 일본 통화 200엔으로, 미국 통화 1달러는 한국 통화 1,000원으로 교환된다면 t시점 대비 1년 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만 고려한다)
- ①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 ② 미국인 여행자는 일본보다 한국 여행을 선호할 것이다.
  - ③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인 수입업자는 유리해질 것이다.
  - ④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 제품보다 높아질 것이다.
  - ⑤ 일본인 투자자가 한국과 미국에 동시 상장된 ☆☆☆전자 주식을 살 때 한국에서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5. A국과 B국 간, B국과 C국 간에만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다음은 2025년 A국~C국의 외화 지급액을 경상 수지 항목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C국의 경상 수지 항목은 우리나라의 분류 기준과 동일하다)

(단위: 억 달러)

구분		A국	B국	C국
경상 수지	상품 수지	100	50	60
	서비스 수지	40	30	80
	본원 소득 수지	40	140	70
	(가)	0	175	0

- ① (가)는 해외 직접 투자액이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② B국의 경상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 ③ 상품 수출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A국이 흑자이다.
- ④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B국이 적자이다.
- ⑤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포함되는 항목은 A국과 C국 모두 적자이다.

## 【 소방학개론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0 세제곱미터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② 3,000 킬로그램의 가연성 고체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 ③ 인화점이 섭씨 100 도이고, 연소열량이 1 그램당 6 킬로칼로리인 고체는 가연성 고체류에 해당한다.
- ④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 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 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급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해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 사고 → 재해’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② 하인리히(Heinrich)의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원인이 되는 단계는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 단계이다.
- ③ 버드(Bird)의 수정 도미노 이론은 ‘제어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재해’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버드(Bird)의 수정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⑤ 버드(Bird)는 ‘중상 1건이 발생하기 전 경상이 29건, 무재해사고가 300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1:29:300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상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를 두며, 소방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소방연구원을 둔다.
- ② 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③ 소방청에 운영지원과·119대응국·화재예방국 및 장비기술국을 두며, 청장 밑에 대변인 및 119종합상황실장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공간의 수용 능력
- ② 다중운집의 목적 및 종류
- ③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 ④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 ⑤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상 긴급구조현장지휘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신속기동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현장지휘요원,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방본부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한다.
- ④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⑤ 통신지원요원은 통제단이 설치·운영되는 경우 통제단의 대응계획부에 배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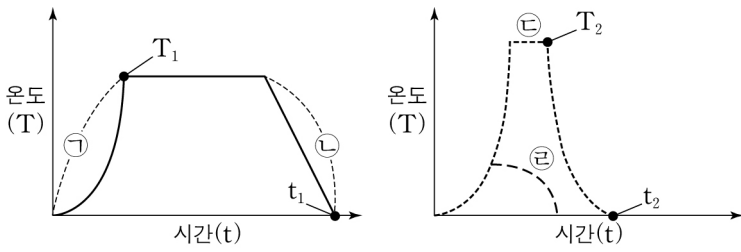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③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증기폭발은 화학적 폭발에 해당한다.
- ② 분진폭발은 분진의 단위체적당 표면적이 커질수록 폭발이 용이해진다.
- ③ 분해폭발은 공기나 산소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열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이다.
- ④ 폭연은 화염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
- ⑤ 폭굉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으로 나타난다.

10. 그림은 동일한 건축 부재의 화재 가혹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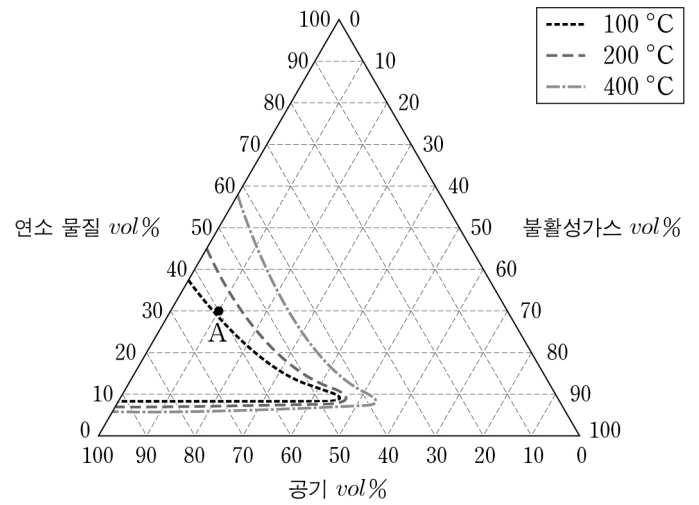
화재 가혹도 및 화재 가혹도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에서 시간  $t_1 > t_2$  이며, 온도  $T_1 < T_2$  이다)

- ① 환기 요소는 화재 가혹도 곡선에서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 ② 영역 ㉠에는 플레임오버(flame over)가, 영역 ㉡에는 백드래프트(back draft)가 일어날 수 있다.
- ③ 화재강도는 주수시간을 좌우하고, 화재하중은 주수열을 좌우한다.
- ④ 방화구획된 구획실 화재 가혹도 곡선은 점선 ㉢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화재제어를 통한 화재 가혹도 곡선은 점선 ㉣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혼재할 수 없는 쌍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frac{1}{10}$  을 초과한다)

- ① 에탄올과 삼산화크롬
- ② 이황화탄소와 증류수
- ③ 클로로벤젠과 아세톤
- ④ 금속포타슘과 유동파라핀
- ⑤ 과염소산과 과염소산포타슘

12. 그림은 연소 범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 지점의 연소 물질, 공기, 불활성가스의 농도는 각각 40 vol%, 50 vol%, 10 vol%이다.
- ② 연소 물질의 농도가 같을 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감소한다.
- ③ 동일한 온도에서, 연소 물질과 공기의 농도가 감소하면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증가한다.
- ④ 공기의 농도 범위가 70~90 vol%일 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연소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 ⑤ 연소 물질의 농도가 20 vol% 이상이고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같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의 농도가 증가한다.

13. 표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연소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연성 물질	연소 범위
메테인	5~15 %
에테인	3~12.5 %
프로페인	2.1~9.5 %
뷰테인	1.8~8.4 %
헵테인	1.05~6.7 %

가연성 물질 1 mol에 대한 임계 산소 농도(minimum oxygen concentration)로 옳은 것은?

- ① 메테인 - 6.5 %
- ② 에테인 - 8.5 %
- ③ 프로페인 - 9.5 %
- ④ 뷰테인 - 11.7 %
- ⑤ 헵테인 - 14.5 %

14. 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0 wt% 이상일 때,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 ② ‘화염 전파속도’는 가연물에 산소가 공급되어 연소 반응하면서 불꽃이 전파되는 속도로서 연소생성물이 생성되는 반응 속도이다.
- ③ ‘아이오딘값(iodine value)’은 유지 100 g이 흡수할 수 있는 아이오딘의 g 수이며, 유지의 포화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아이오딘값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뉜다.
- ④ ‘감광계수’는 빛이 산란되는 계수로서 연기 농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감광계수가 커지면 빛이 감소하고 시야가 좁아져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 ⑤ ‘제연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CO<sub>2</sub> 질량(g)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보 기>—

- 공기의 구성비는 산소 20 vol%, 질소 80 vol%이다.
- 화재가 발생한 공간은 22.4 m<sup>3</sup>이다.
- 연소 과정에서 산소 농도가 20 vol%에서 10 vol%로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산소 농도만큼 IG-541 소화약제가 주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 가연물 연소 시 발생한 가스는 무시한다.
- 1 mol의 가스 부피는 22.4 L로 가정한다.

- ① 176
- ② 352
- ③ 440
- ④ 1,760
- ⑤ 4,400

16. <보기>를 바탕으로 뷰테인 464 g이 완전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산소 부피(m<sup>3</sup>)와 이론 공기량(kg)으로 옳은 것은?

—<보 기>—

- 표준 상태(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에서 이론 산소 부피(m<sup>3</sup>)와 이론 공기량(kg)을 계산한다.
-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른다.
- 공기의 구성비는 산소 20 vol%, 질소 80 vol%이다.
- 공기의 mol 질량은 주어진 공기의 구성비로 계산한다.
- 최종 계산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론 산소 부피(m <sup>3</sup> )	이론 공기량(kg)
①	0.59	1.89
②	0.59	3.78
③	1.16	3.78
④	1.16	7.49
⑤	2.34	7.49

17. 금속탄화물 중 물과 반응하였을 때, 다른 종류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Al<sub>4</sub>C<sub>3</sub>
- ② Li<sub>2</sub>C<sub>2</sub>
- ③ Na<sub>2</sub>C<sub>2</sub>
- ④ K<sub>2</sub>C<sub>2</sub>
- ⑤ MgC<sub>2</sub>

18. <보기>의 내용에 관한 화재패턴으로 옳은 것은?

<보 기>

인화성 액체가 콘크리트나 시멘트 바닥에 접착제로 붙어 있는 비닐타일 등에 쏟아졌을 때, 타일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스며들어 접착제를 용해시키게 된다. 실내가 강한 복사열로 가득차게 되면 타일의 틈에서 인화성 액체와 접착제의 화합물이 더욱 격렬하게 연소된다. 결과적으로 타일 아래의 바닥에 타일 등의 바닥재가 틈새모양으로 변색되고 박리되기도 하는데, 이때 바닥에서 보이는 흔적을 말한다.

- ① 포어패턴(pour pattern)
- ② 레인보우이펙트(rainbow effect)
- ③ 고스트마크(ghost mark)
- ④ 스플래시패턴(splash pattern)
- ⑤ 도넛패턴(doughnut pattern)

19. 포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포소화약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백포는 표면하주입방식이 가능하고 유동성이 좋으나 내열성이 약해 탱크 내벽을 따라 잔불이 남는 윤화(ring fire)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② 불화단백포는 양친매성으로 내열성과 점착성이 좋으나 유동성과 내유성에 약하다. 특히, 유동성이 작아 소화 속도가 느리다.
- ③ 합성계면활성제포는 단친매성이며 표면하주입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고 내열성과 내유성이 우수하며 장기보관이 가능하다.
- ④ 내알코올형포는 점성이 크고 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질,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소화약제이다.
- ⑤ 수성막포는 양친매성으로 저팽창에서 고팽창까지 팽창 범위가 넓어 고체 및 기체 등에서 사용범위가 크고, 점착성이 커 입체적인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고팽창(발포)형의 경우에는 수분이 적어 포가 빨리 소멸한다.

20. 할로젠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에 관한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소화약제	화학식
①	HFC-125	$C_4F_{10}$
②	HFC-227ea	$CF_3CHFCF_3$
③	IG-01	$N_2$
④	IG-100	Ar
⑤	FC-3-1-10	$CHF_3$

21. 물리적 소화방법에 관한 설명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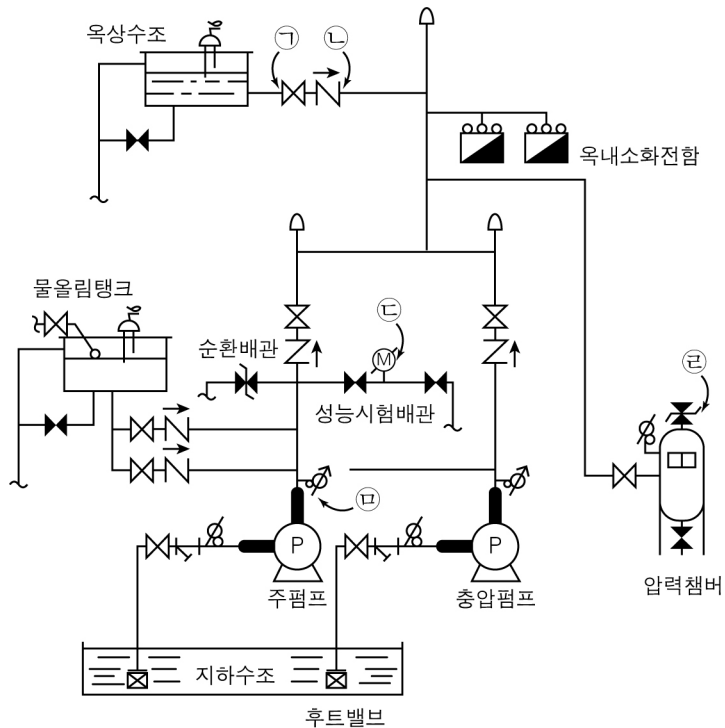
- ① 화재 발생지 주변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한다.
- ② 화재 발생지 주변에 불활성기체를 분사하여 산소 농도를 연소범위 이하로 떨어뜨린다.
- ③ 중질유(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화재 시 물을 무상으로 주수하거나 유류 화재 시 포소화 약제를 방사하여 유류표면에 얇은 막의 유화층을 형성시킨다.
- ④ 입으로 촛불을 불어서 끈다.
- ⑤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소화약제로 연소물질을 덮는다.

22. 건축물 화재의 특수한 화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드래프트(back draft)를 정의하는 요소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 제한된 또는 밀폐된 공간, 갑작스러운 공기(산소)유입 등이 있다.
- ② 백드래프트(back draft)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③ 롤오버(roll over)는 실의 상부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발화온도 이상 도달했을 때 발화하는 현상이다.
- ④ 롤오버(roll over)는 화염이 선단부(앞쪽 끝부분)에서 주변 공간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 ⑤ 플래시오버(flash over)는 천장 부근에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어느 시기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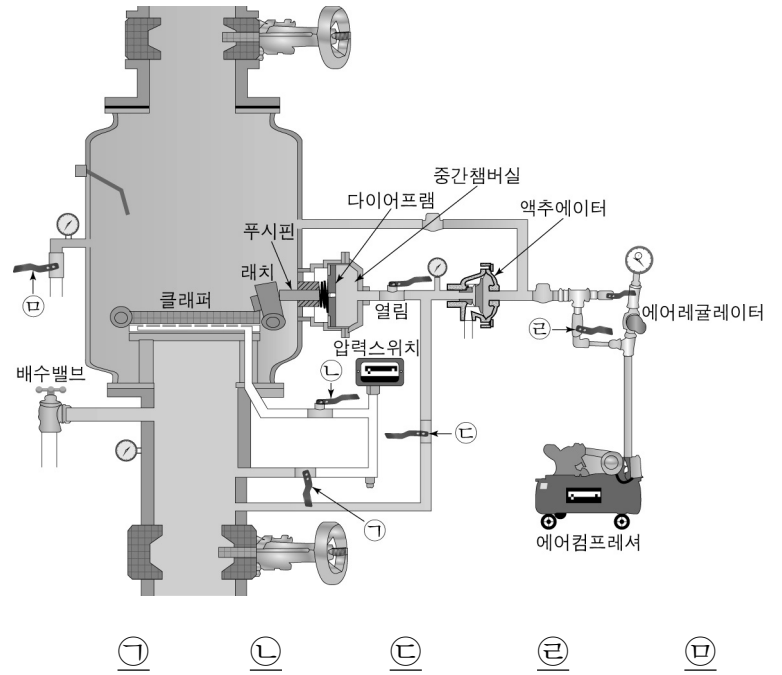
23. 그림은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의 부속품 명칭으로 옳은 것은? (단, 이 그림에 한하여 찾는다)



- ① ㉠ - 체크밸브
- ② ㉡ - 안전밸브
- ③ ㉢ - 유량계
- ④ ㉣ - 배수밸브
- ⑤ ㉤ - 진공계

24. 그림은 건식스프링클러설비 부속 부품인 밸브를 나타낸 것이다. ㉠~㉤ 명칭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이 그림에 한하여 찾는다)



- ① 경보정지 경보시험 셋팅(급수) 바이패스 작동시험
- ② 경보시험 경보정지 작동시험 바이패스 셋팅(급수)
- ③ 경보정지 경보시험 바이패스 작동시험 셋팅(급수)
- ④ 경보시험 경보정지 바이패스 작동시험 셋팅(급수)
- ⑤ 경보시험 경보정지 셋팅(급수) 바이패스 작동시험

25.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크롤레인( $\text{CH}_2\text{CHCHO}$ )은 석유제품 및 유지류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데, 자극성이 크고 맹독성을 지닌다.
- ② 포스겐( $\text{COCl}_2$ )은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생성물로서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이다.
- ③ 이산화질소( $\text{NO}_2$ )는 질산셀룰로오스가 연소 또는 분해될 때 생성되며, 질산암모늄( $\text{NH}_4\text{NO}_3$ )과 같은 질산염 계통의 무기물질이 포함된 화재에서도 발견된다.
- ④ 염화수소( $\text{HCl}$ )는 PVC와 같이 염소가 함유된 수지류가 연소할 때 주로 생성되고 기도와 눈 등을 자극하며 금속에 대해 강한 부식성이 있다.
- ⑤ 아크롤레인( $\text{CH}_2\text{CHCHO}$ ), 포스겐( $\text{COCl}_2$ ), 이산화질소( $\text{NO}_2$ ), 염화수소( $\text{HCl}$ ) 중 TLV-TWA(ppm)이 가장 높은 것은 이산화질소( $\text{NO}_2$ )이다.